

	보도자료 (2019. 4. 17 수) 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9	
---	---	---

13대 분야로 살펴보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 「⑦ 국제정치」 분야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국제정치’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회(회장 김석우 교수) 및 관련 전문가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생존(survival)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한국이 다가올 국제정세의 격변에 어떠한 대응을 펼쳐야 할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제정치 변화의 핵심에 있는 미-중 패권경쟁, 경제적 상호의존도, 국제기구, 일본의 군사 대국화, 중국 권위주의의 공고화를 동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 선호되는 국제정치의 미래와 피해야 할 국제정치의 미래를 구분하여 어떻게 선호하는 국제정세를 만들지에 관한 한국의 기본적인 외교안보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국제정치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02-2224-9806, ynomade@nafi.re.kr)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국제정치’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회(회장 김석우 교수) 및 관련 전문가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 국제정치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국제정치 혹은 국제정세의 미래는 국제정치 핵심 동인(major drivers)인 ‘미-중 세력균형 여부,’ ‘국제제도 역할의 강화 여부,’ ‘경제적 상호의존성 (economic interdependence)의 증가 여부,’ ‘일본의 군사대국화 여부,’ ‘중국권위주의의 공고화 여부’등에 초점을 두어 이 동인들의 2050년 모습을 극점으로 예측하고 미래 예측의 방법론인 시나리오 매핑(scenario mapping)을 동원해 2050년경 국제정세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50년 국제정치에 대한 선호시나리오는 ‘평화 공존모델’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 우위의 힘의 질서가 유지되며 일본역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의 힘의 우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가 유지되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두 강대국은 무역전쟁에서 경제협력의 제도화로 옮겨가게 된다.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미국의 우위가 반영되어 안보는 현재 UN시스템과 NATO시스템이 유지되며 국제경제는 IMF와 WTO에 의해서 관리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국제사회와의 증가하는 교류의 영향으로 정치체제를 더욱 다원화시킬 것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서구적 가치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의 반대인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측되었다. 일명 ‘제한전쟁모델’로 명명된 이 시나리오는 미래 국제사회가 가장 피해야 할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력전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의 군비경쟁, 국제정세의 급변, 동맹체제의 변화,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등의 불확실성을 동반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권국 지위에 오르는 중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유인하며 동북

아시아의 안보환경은 최악으로 흘러가게 된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형태의 냉전(Cold War)으로 이어지며 이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기구(IGOs)의 역할이 둔화된다. 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 한국의 국제전략 선택지가 좁아지며 미국과 중국과의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의 처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중국 권위주의 정권의 공고화가 동북아시아 안보의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앞에서 언급된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은 동북아 안보레짐(security regime)의 형성을 주도하여야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그 롤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한미협력과 동맹강화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특히 일본의 군사 강국화를 억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세번째 대안 전략으로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꼽았다. 이는 동북아의 긴장 사태를 남북이 앞장서 예방하고 중국의 무리한 한반도 개입 및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역내경제통합 주도 및 경제협력의 다각화 그리고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강화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고 선호하는 국제 및 동북아 정세로 가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제시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를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내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11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국제정치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02-2224-9806, ynomade@nafi.re.kr)